

나군의 거친 생각 브렉시트(Brexit)

글. 나영채 YTN IT시스템팀

들어가면서

영국은 입헌군주제를 기본으로 하여 근대적 의회제도와 의원내각제를 전 세계로 전파한 국가이며, 제일 먼저 산업화한 산업혁명의 발원지이자, 19세기와 20세기 초반 세계 인구와 영토의 1/4을 차지한 초강대국으로,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 불리는 눈부신 영광을 누리던 나라였다.

하지만 현재 영국의 정치권은 브렉시트(Brexit,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때문에 조롱의 대상으로 전락했다. 2016년 6월 국민투표를 통해 브렉시트를 결정한 지 2년 10개월이 지났지만 언제 유럽연합(EU)을 탈퇴할지, 어떻게 탈퇴할지 정해놓은 게 하나도 없다. 의원들이 브렉시트를 놓고 답도 없는 흥정을 매일 같이하는 가운데 애초 3월 29일로 예정됐던 브렉시트 시한은 또다시 지나갔다. 한때 세계를 주름잡았던 영국의 수장이 EU에 브렉시트 연기를 간청하고, EU는 마지못해 브렉시트 연기 요청을 들어주는 모습은 습관처럼 굳어졌다. 4월 12일까지로 2주 연기해준 데 이어 이번에는 최장 10월 31일까지로 6개월 늘려줬다. 하지만 브렉시트를 둘러싼 해법은 여전히 보이지 않는다. 의원들은 아무런 합의 없이 EU를 탈퇴하는 '노 딜 브렉시트', '2차 브렉시트 국민투표' 등 저마다 각기 다른 주장을 반복해서 내놓는다. 지난 3년 여간 영국을 혼란으로 몰고 간 브렉시트를 정리해보려고 한다.

유럽 공동체의 시발점

2016년 6월 23일 브렉시트 국민투표를 앞두고, 윈스턴 처칠(Winston Churchill) 전 총리가 살아있다면 EU 잔류와 탈퇴 중 어느 쪽을 선택할까를 두고 논쟁이 벌어졌다. 처칠은 영국이 EU에 가입하기 전 사망했는데도, EU 잔류와 EU 탈퇴 진영은 서로 '처칠은 우리 편'이라고 주장했다.

EU 잔류를 지지하는 처칠의 손자 니콜라스 솜스(Nicholas Soames) 하원 의원은 "할아버지는 영국이 (유럽 대륙에서) 고립되는 것을 세상에서 가장 싫어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데이비드 캐머런(David Cameron) 전 총리도 "2차 세계 대전 이후 처칠은 서유럽이 함께하고, 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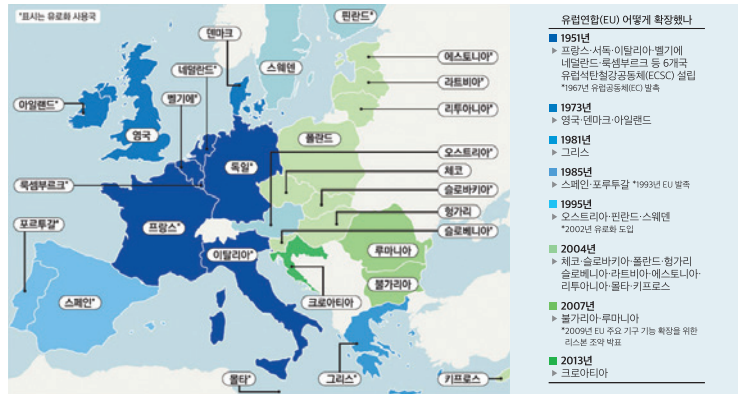
유무역을 증진하고, 유럽이 다시는 전쟁에 빠지지 않게 할 기구를 설립하는데 열성적이었다."며 "그는 영국이 혼자 이기를 원하지 않았다."고 했다.

반면 EU 탈퇴 진영의 대표적 인물이자 처칠 전기를 쓰기도 한 보리스 존슨(Boris Johnson) 전 런던시장장은 데일리 텔레그래프 인터뷰에서 "처칠의 비전은 영국이 유럽 대륙에서 탄생할 '초국가'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었다."며 "그



윈스턴 처칠 (1874~1965)

는 (유럽 국가들의) 결혼은 지지하지만, 영국은 그 결혼에 참여하지 않는 존재로 봤다.”고 했다. 역사학자인 앤드루 로버츠(Andrew Roberts)도 “처칠이 살아있다면 의심할 여지 없는 EU 탈퇴 지지론자였을 것”이라고 말했다. EU 잔류와 EU 탈퇴 양 진영 모두에서 처칠을 자신의 편이라 주장하는 이유는 그의 정치적 영향력뿐만이 아니라 그가 유럽 공동체 형성에 미친 영향력을 고려하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싶다. 그리고 물론 시기는 다르지만, 처칠의 언행을 보면 유럽 공동체에 대한 영국인의 생각을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듯싶다.



유럽연합 확장

1929년 내각에서 사퇴하고 유럽 전역을 여행하던 처칠은 1930년 2월 미국 ‘새터데이 이브닝 포스트’ 기고에서 “우리는 우리만의 꿈과 임무가 있다. 우리는 유럽과 함께 하겠지만 유럽 자체는 아니다.”라고 썼었다. 반면 제2차 세계대전(1939~1945)의 상흔이 채 가시지 않은 1946년 9월 영국 총리직에서 물러난 후 야당 대표로 있었던 처칠은 스위스 취리히 대학에서 수천만 명의 학생자를 낸 두 차례 세계대전을 겪은 유럽 내에서 다시는 전쟁이 발생하지 않고 평화·안전·자유 속에서 살 수 있도록 유럽 합중국(a kind of United States of Europe)을 건설하자 했다. 이 연설에서 언급된 유럽 합중국에서 유럽 공동체라는 개념이 시작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영국과 유럽

영국이 EU의 전신인 유럽경제공동체(EEC)에 늦게 합류한 이유는 스스로 동참하지 않았던 것이 가장 크지만, 2차 대전 때 프랑스가 독일에 항복하자 런던으로 망명하여 항독 투쟁을 전개했던 군인 출신의 프랑스 대통령, 샤를 드골(Charles de Gaulle)의 견제도 한몫했다. 드골은 “영국은 미국의 유럽 내 영향력 확보를 위한 트로이의 목마다.”라며 영국의 EEC 가입 신청에 대해 이 같은 이유를 들어 1967년 11월 27일 거부권을 행사했다. 1963년에 이어 두 번째로 놓은 퇴짜였다. 2차 대전 때 나치 독일에 점령된 프랑스의 독립을 위해 대규모 병력과 물자를 지원하여 독일군에 맞서 함께 싸운 우방국의 간청을 매몰차게 뿌리친 격이기 때문에 영국으로선 짙은 배신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영국은 별다른 도리가 없었고, 결국 드골의 퇴임 이후인 1973년에야 ‘2전 3기’ 만에 EEC에 합류하게 된다.

드골이 영국을 믿지 못한 데에는 그럴 만한 배경이 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영국의 대(對)유럽 외교 노선은 본의 아니게 외부 세계로부터 외면당하는 소극적 고립이나 스스로 문을 걸어 잠그는 방어적 쇄국의 의미가 아닌, 유럽 대륙 내에서 영국에 위협이 되는 패권 국가가 출현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억제하는 세력 균형 정책(Balance of Power)에 기반한 ‘명예로운 고립(Splendid Isolation)’이었다. 자신들에게 필요한 경우에는 선제적이고 무자비하게 개입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항상 일정한 거리를 뒀다.

일례로 1940년 동맹국이었던 프랑스가 나치 독일에 항복하고 나치 독일의 괴뢰 정부인 비시 프랑스(Vichy France) 정부가 수립되자, 영국은 거의 멸절하게 남아있는 프랑스 해군 함대가 독일의 손아귀에 떨어질 것을 매우 두려워하게 된다. 이에 영국은 며칠 전까지 함께 싸웠던 프랑스인들에게 프랑스 함대 스스로 자침시키거나 영국의 통제를 받으라고 요청한다. 그리고 이에 불응하자 프랑스 전 해군을 궤멸시켜 버렸다. 이 작전의 이름이 캐터펄트(Operation Catapult)였다. 이런 유구한 역사적 전통을 가진 영국은 1951년 유럽석탄철강공동체(ECSC) 창설에도, 1957년 EEC 출범에도 동참하지 않았다. 그러다 영국 경제가 침체에 빠진 반면, 다른 서유럽 국가들은 번영하기 시작하자 EEC 가입을 추진했다.

사실 유럽 통합에 대한 영국의 회의적 시선은 사라진 적이 없다. 1975년 EEC 탈퇴 여부를 묻는 국민투표 시행이 대표적이다. ‘잔류 희망 67%’로 부결됐다 해도, 가입한 지 불과 2년 만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건 꽤 상징적이다. 1993년 EU의 공식 출범 때에도 영국은 ‘유로화’라

는 단일통화에 참여하지 않고 파운드화를 계속 쓰기로 했고, 쉥겐협약(Schengen Agreement)도 가입하지 않았다. 그리고 2016년 6월 23일이 왔다.

브렉시트의 과정

2012년 말 유럽 재정위기를 기점으로 영국이 EU 내에서 연간 15조 원에 달하는 분담금과 이민자 수용 등 지나치게 높은 의무를 진다는 불만이 높아졌다. 특히 저소득층과 대영제국 향수가 남아있는 중장년층을 중심으로 브렉시트에 힘이 실렸다.

이런 상황에서 영국 전 총리이자 보수당 전 대표인 데이비드 캐머런(David Cameron)이 브렉시트



데이비드 캐머런 (1966~)

의 불씨를 잡아당겼다. 2010년 총선에서 총리로 당선된 그는 당내에서 EU 회의론이 득세하자 입지가 좁아졌다. 이에 캐머런 전 총리는 2013년 1월 총선을 앞두고 2017년까지 브렉시트 국민투표를 시행하겠다고 공약했다. 2015년 총선에서 보수당 승리로 국민투표가 기정사실로 되자 캐머런 총리는 국민투표일을 2016년 6월 23일로 정했다. 막상 국민투표로 EU 탈퇴 결정이 내려지자 캐머런 전 총리는 사임했다. 이어서 테리사 메이(Theresa May)가 2016년 7월 13일 총리에 올랐다. 메이 총리는 2017년 3월 29일 EU의 헌법 격인 리스본 조약에서 탈퇴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 50조를 발동했다. 이에 따라 영국과 EU는 공식 통보일로부터 2년간 탈퇴에 관한 협상을 진행하고,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하더라도 통보일로부터 2년 후인 2019년 3월 29일 23시(그리니치표준시)에 탈퇴하기로 했다.

브렉시트 합의안

영국과 EU는 2018년 11월 브렉시트 합의안을 도출했다. 영국의 리스본 조약 50조 발동에 따라 양측이 협상을 시작한 지 약 1년 5개월 만이다. 브렉시트 합의안은 'EU 탈퇴 협정'과 '미래관계 정치선언' 두 가지로 구성된다. EU 탈퇴 협정은 '브렉시트 전환 기간', '안전장치(backstop)', '분담금 정산', '상대국 국민의 거주 권리' 등 브렉시트 조건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총 585쪽으로

법적 구속력을 갖고 있다.

이 'EU 탈퇴 협정'에서 핵심은 '브렉시트 전환 기간'과 '안전장치'다. 영국에 브렉시트 적용 시간을 주자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전환 기간은 브렉시트 시행일로부터 2020년까지다. 이 기간 영국은 EU의 단일시장과 관세동맹 잔류의 혜택은 계속 누릴 수 있다. 하지만 EU의 의사결정 과정에 더는 참여할 수 없고 EU 규정을 따라야 한다.

안전장치는 EU 회원국 아일랜드와 영국령 북아일랜드의 엄격한 통행·통관 절차, 즉 '하드보드'의 부활을 막기 위한 것이다. 영국과 EU가 전환 기간 무역 관계 등 별도의 미래관계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전환 기간이 끝나는 시점에 안전장치를 발동하여 영국 전체를 당분간 EU 관세동맹에 잔류하도록 한다.

합의안의 또 다른 축인 '미래관계 정치선언'은 브렉시트 이후 진행될 미래관계 협상의 기본토대에 관한 것이다. EU와의 향후 무역, 안보, 환경문제 관계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총 26쪽 분량으로, EU 탈퇴 협정보다 모호한 단어와 문장으로 구성됐으며 법적 구속력은 없다.

브렉시트 지체 이유

브렉시트가 이렇게 지지부진한 이유는 영국에서 합의안이 비준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브렉시트가 시행되기 위해서는 영국과 EU의 최종 비준이 필요한데, 영국에서는 비준이 의회의 벽에 가로막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영국 의회는 작년 EU 탈퇴법 제정을 통해 비준 동의 이전에 정부와 EU와의 협상 결과에 대해 하원의 승인투표를 거치도록 했다. 브렉시트에 대한 의회의 통제권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메이 총리는 EU 탈퇴 협정과 미래관계 정치선언으로 구성된 브렉시트 합의안을 승인투표에 부쳤지만 세 차례에 걸쳐 부결됐다. 첫 승인투표(지난 1월 15일)는 230표 차로, 2차(지난 3월 12일)는 149표 차로 각각 부결됐다. 3월 29일에는 브렉시트 합의안 중 EU 탈퇴 협정만 따로 떼어내 세 번째 표결했으나 이 역시 58표 차로 거부됐다.

하원에서 부결되는 이유

하원의 의석 구성을 살펴보면 총 의석 650석은 보수당(313석), 노동당(246석), 스코틀랜드국민당(SNP·35석), 자유민주당(11석), 체인지 UK·독립그룹(TIG·10석), 북아

날짜	내용
2016년 6월 23일	英, 브렉시트 국민투표 실시
6월 24일	투표 결과, 찬성 51.9% 반대 48.1%
7월 13일	메이, 영국 총리 취임
2017년 6월~11월	영국-EU, 브렉시트 협상 착수
12월 8일	英-EU, 브렉시트 1단계 협상 타결
2018년 2월 28일	EU, 브렉시트 협정 초안 발표
11월 25일	英-EU, 브렉시트 합의안(EU 탈퇴협정 및 미래 관계 정치 선언)에 공식 서명
2019년 1월 15일	英 하원, 1차 승인투표서 브렉시트 합의안 230표차 부결
3월 12일	英 하원, 2차 승인투표서 브렉시트 합의안 149표차 부결
3월 20일	메이, EU에 브렉시트 6월 30일까지 연기 요청
3월 21일	EU, 브렉시트 시한 4월 12일로 연기(하원 합의안 승인 시 5월 22일까지)
3월 29일	기존 브렉시트 예정일, 英 하원 3차 승인투표서 EU 탈퇴협정 58표차 부결
4월 3일	英 하원, '노 딜 불렛시트' 방지 위한 브렉시트 연기 법안 통과
4월 5일	메이, EU에 브렉시트 6월 30일까지 연기 요청
4월 10일	EU, 브렉시트 최장 10월 31일까지 연장 합의

브렉시트 국민투표 후 일지

일랜드의 연방주의 정당 민주연합당(DUP·10석), 아일랜드 민족주의자 정당인 신페인당(7석), 웨일스당(4석), 녹색당(1석), 무소속(12석) 그리고 의장(1석)으로 구성된다. 보수당인 하원의장과 각각 보수당, 노동당 1명, 2명씩으로 구성된 3명의 부의장, 신페인당 의원 7명 등 11명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기 때문에, 메이 총리의 합의안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320명의 찬성표가 필요하다. 메이 총리가 노동당 등 야당을 빼고 보수당(313석)과 보수당과 연정을 구성 중인 DUP(10석)의 표만 확보하면 과반을 확보할 수 있다. 하지만 투표 때마다 보수당 내에서 강경파를 중심으로 이탈표가 나오고 DUP는 항상 반대표를 던져 합의안이 매번 부결되고 있다. 이에 메이는 총리직까지 내걸며 이들을 상대로 설득 작업을 벌였지만 과반 확보에는 역부족이다.

강경파와 DUP가 반대표를 던지는 이유는 메이 총리의 합의안에 담긴 안전장치 때문이다. 독일과 프랑스가 주도하는 EU에 불만을 품고 있는 강경파는 EU와 완전한 결별을 뜻하는 '하드 브렉시트'만이 유일한 길이라고 보고 있다. 이들은 EU의 관세동맹에서 벗어나 다른 국가와 자유로운 무역협정을 체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안전장치가 발동되면, 이 장치에 별도 종료 시한이 없는 탓에 영국이 EU의 관세동맹에 무기한 간헐 수 있다. 강경파가 반대표를 던지는 이유다. 또 안전장치가 발동되면 북아일랜드만 EU의 상품규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영국 본토와 북아일랜드 사이에 어떤 장벽도 없어야 한다는 DUP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이에 1차 승인투표에서 고배를 마신 메이 총리는 지난 3월 11일, EU 측과 만나 영국이 영구적으로 안전장치에 간헐하지 않도록 법적 문서를 통해 보장하고, 일방적 종료 권한을 부여받는 내용의 보완책에 합의했다. 하지만 제프리 콕스(Geoffrey Cox) 영국 법무상이 법률 검토를 통해 영국은 EU 동의 없이 안전장치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결과를 내놓자 강경파와 DUP이 2차 승인투표에서 반대표를 던졌다.

안전장치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배경

현재 EU 회원국인 영국의 북아일랜드와 아일랜드 사이에는 국경 통제가 없다. 하지만 브렉시트가 시행되면 북아일랜드와 아일랜드 사이의 국경 장벽이 세워지게 되며, 통행과 통관이 엄격히 통제된다. 영국과 EU는 모두 하드보더 만큼은 피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아일랜드와 북아일랜드 사이의 물리적 국경이 부활할 경우 과거 1960년대부터 약 30년간 이어졌던 북아일랜드를 둘러싼 긴장감이 다시 살아날 수 있기 때문이다.

북아일랜드에서는 1960년대 말부터 90년대까지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요구해온 아일랜드공화국군(IRA)과 영국 간 유혈 대립인 북아일랜드 분쟁이 지속했다. 각종 유혈 사태로 1998년 북아일랜드 평화협정인 '벨파스트 협정(Belfast Agreement)'이 체결되기 전까지 3,500명 이상이 목숨을 잃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1972년 북아일랜드 런던데리에서 영국계 신교도와 동등한 권리를 요구하며 행진하던 비무장 가톨릭교도들을 향해 영국 공수부대가 무차별 총격을 가해 14명이 사망한 일명 '피의 일요일' 사건은 북아일랜드 억압의 역사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건으로 꼽힌다.

수많은 유혈사태 이후 1998년 영국과 아일랜드 정부 사이에 벨파스트 협정이 체결되면서 양측의 갈등은 가파르게 봉합됐다. 아일랜드는 북아일랜드 6개 주에 대한 영



피의 일요일 사건

유권을 포기했으며, 북아일랜드와 아일랜드 간의 통행도 보장됐다. 또 무장단체 IRA도 해체 단계를 밟기 시작했다.

이런 잔인한 역사를 기억하는 영국인들 사이에서는 노 딜 브렉시트로 아일랜드와 북아일랜드에 갑작스럽게 통행·통관의 자유가 사라져 다시 국경선이 그어질 경우 북아일랜드에서 과거와 같은 충돌이 재연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영국 의회는 무엇을 했나?

영국 의회는 메이 총리의 합의안에서 뾰족한 수를 찾지 못하자 결국 자체적으로 대안을 찾기로 한다. 2차례에 걸쳐 3월 27일과 4월 1일 실시한 '의향투표'가 그 예다. 의향투표는 하원의 과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브렉시트 방안을 찾을 때까지 제안된 여러 방안에 대해 수차례 투표를 하는 것이다. 일종의 인기투표다. 하지만 그 어떠한 안도 과반을 얻지 못했다. 두 차례에 걸쳐 '영구적 관세동맹 잔류', '유럽 경제 지역(EEA)에 참가하고 포괄적인 관세동맹에 잔류', '최종 브렉시트 안에 대해 제2차 국민투표를 시행', '노 딜 브렉시트 발생 2일 전에 의회투표를 통해 이를 확정' 등이 표결에 부쳐졌지만, 답을 찾지 못했다.

이처럼 의회가 대안 모색에 실패한 것은 의견이 워낙 갈려있기 있기 때문이다. 보수당에서의 진영은 EU와의 관계를 완전히 정리하는 '하드 브렉시트(Hard Brexit)'와 EU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소프트 브렉시트(Soft Brexit)'로 나뉜다. 한편 야당은 '소프트 브렉시트'와 '브렉시트 2차 국민투표'를 주장하는 진영으로 갈린다.

브렉시트 현재 상황

이렇게 공전을 거듭한 브렉시트는 아무런 결론을 내지 못한 채, 메이 총리와 EU는 4월 11일, 브렉시트 시한을 조건부로 최장 10월 31일까지 연기하기로 했다. EU와 영국은 브렉시트 애초 예정 시점을 8일 앞둔 21일, 브렉시트 시한을 한 차례 연장한 바 있다. 이번으로 두 번째 연장을 한 셈이다.

첫 연기 당시, EU는 연기 합의 일자리를 기준으로 그다음 주까지 영국 하원에서 EU 탈퇴 협정이 통과되지 못하면 4월 12일까지 브렉시트 시한을 연장해주기로 했다. 대신 4월 12일 전까지 아무런 합의 없이 EU를 탈퇴하는 '노 딜 브렉시트(No-deal Brexit)'나, 유럽의회 선거 참여를 전제로 한 브렉시트 '장기 연기'를 선택하라고 요구했다. 다만, 하원이 EU 탈퇴 협정을 승인할 경우 브렉시트 시한을 5월 22일로 연기해주기로 했다.

이번 두 번째 연기에서 EU 정상들은 브렉시트 시한을 최장 10월 31일로 연기하는 데 합의하면서도 조건을 달았다. 우선, 영국이 오는 5월 22일까지 EU 탈퇴 협정을 비준하지 못해 5월 23~26일 유럽의회 선거기간에도 EU 회원국으로 남아있다면 영국은 유럽의회 선거에 참여해야 한다. 영국이 이런 의무를 지지 않을 경우 브렉시트는 자동으로 6월 1일 이뤄진다.

영국이 유럽의회 선거에 참여하게 될 경우, EU 정상들은 오는 6월 20~21일 열리는 EU 정상회의에서 영국 하



원의 EU 탈퇴 협정 승인 가능성 등을 놓고 브렉시트 진척 상황을 평가할 예정이다. 그뿐만 아니라 EU는 영국이 시한 이전에 탈퇴할 수 있는 길도 열어줬다. 영국 의회에서 EU 탈퇴 협정이 통과된 뒤 영국과 EU가 이를 최종 비준하면, 비준 시점 다음 달 1일 영국이 EU를 탈퇴할 수 있도록 했다.

브렉시트 전망

메이 총리가 지난해 11월 EU와 합의안을 도출했을 때와 달라진 게 없다. 영국에 주어진 선택지는 종전과 마찬가지로 '메이 총리의 합의안 수용', '노 딜 브렉시트', '브렉시트 취소', '2차 브렉시트 국민투표'다. 단지 시점만 연기했을 뿐이다.

메이 총리는 보수당 내 강경파와 DUP 설득을 포기하고 '소프트 브렉시트'를 선호하는 노동당과 협상을 통해 돌파구 마련을 시도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까지 도출된 결과물은 없다. 양측은 브렉시트 합의안 중 EU 탈퇴 협정을 제외하고 나머지 한 축인 미관관계 정치선언에 반영할 수 있는 내용을 논의하고 있다. EU 측이 법적 구속력 있는 탈퇴 협정은 수정할 수 없다고 선을 그어놨기 때문이다.

노동당은 EU 관세동맹 잔류, 브렉시트 대안에 관한 확정 국민투표 등을 메이 총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메이 총리는 관세동맹 잔류, 국민투표 등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어 간극은 좁혀지지 않고 있다.

마치면서

유엔 직속 기구인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는 지난 4월

9일 발간한 '브렉시트가 개발도상국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보고서에서 '노 딜 브렉시트' 때 영국의 교역국들에 미칠 손익을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영국의 교역량은 전 세계 무역의 약 3.5%를 차지하는데, 지난해 영국은 6800억 달러(약 773조 원) 규모의 상품을 수입한 것으로 집계했다.

EU와 무역협정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들은 한 국가가 통상교역에서 어떠한 국가에 부여하는 최상의 권리와 이득을 다른 국가들에게도 동일하게 부여해야 한다는 원칙인 최혜국대우 조건을 따르기 때문에 '노 딜 브렉시트'가 실현될 경우 오히려 이익을 얻을 것으로 보고서는 전망했다.

한국과 긴밀한 관계인 3개국의 경우, 대영 수출증가액이 지난해 수출 대비 중국은 17% 수준인 102억 달러(약 11조6000억 원), 미국은 9%인 53억4000만 달러(약 6조710억 원), 일본은 38%에 해당하는 49억 달러(약 5조5000억 원)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반면, EU는 11% 수준인 355억 달러(약 40조3천700억 원), 한국은 14%에 해당하는 7억1400만 달러(약 8100억 원)가 감소할 것이라 전망했다.

브렉시트의 향방을 모른다는 불확실성 하나만으로도 이미 충분히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데, 아직 EU 회원국 중에서 몇몇은 2009년 말에 발생한 그리스 국가 부채 위기의 영향으로부터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핀란드, 스웨덴 등 탈퇴를 논의하는 회원국도 늘어나는 상황이기때문에, 향후 브렉시트가 전 세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예상하기 어렵다. 🌐

참고

- 위대한 영국인 윈스턴 처칠의 리더십...따뜻한 유머를 입은 불굴의 용기 / 박기종 / 매일경제
<https://www.mk.co.kr/news/culture/view/2015/12/1142884/>
- 프랑스 영국의 EEC 가입 연달아 거부권.. 51년 전 유럽의 의심, 결국 현실로 / 김정우 기자 / 한국일보
<http://www.hankookilbo.com/News/Read/201811250924026374>
- 처칠이 꿈꾼 '하나의 유럽'...70년뒤 후손들은 '해체' 불붙여 / 이지용 기자 / 매일경제
<https://www.mk.co.kr/news/special-edition/view/2016/06/454581/>
- 명예로운 고립(Splended Isolation) / 주둔병단
https://www.nabers.co.kr/bbs/board.php?bo_table=board30&wr_id=91
- 캐터펄트 작전 / 나무위키
<https://namu.wiki/w/캐터펄트 작전>
- 답없는 브렉시트, 어디까지 왔나...국민투표부터 2차 연기까지 / 이흥규 기자 / 뉴스핌
<http://www.newspim.com/news/view/20190412000712>
- Current State of the Parties / 영국 의회
<https://www.parliament.uk/mps-lords-and-offices/mps/current-state-of-the-parties/>
- "'노딜 브렉시트' 한국에 직격탄...중국·미국·일본은 웃는다" / 장재은 기자 /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190417120300009>
- 다음은 핀란드·스웨덴...영국·EU탈퇴 도미노? / 강다영 기자 / 매일경제
<https://www.mk.co.kr/news/special-edition/view/2016/06/454584/>

